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연구

- 노후소득 감소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가구분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가구분화가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소득과 노인빈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이 적고 퇴직 후 소득절벽으로 인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 단위로 추정되는 빈곤율 산출 방식으로 인해 추정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세대는 자녀 교육, 혼인 등으로 노후준비가 늦고, 조기퇴직, 공적연금의 낮은 시행 등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함에 따라 퇴직 후 소득절벽에 직면할 우려 있음
 - 그러나,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추정되므로 전체 소득이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만으로 빈곤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가구분화 유형 및 특징) 노인가구의 분화는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세대간 분화되거나 황혼이혼으로 세대내 분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구분화 시 소규모화되고 가구 수는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 노인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439만 노인가구 중 노노세대가구는 1%,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가구는 16.1%, 노인부부가구는 33.2%, 독거노인가구는 34.2%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가구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노인/자녀가구의 분화로 인해 노인세대 소득은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노인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큼
- (가구 변화 고려한 정책) 가구 규모 변화가 노인빈곤율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정책과 더불어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가구 소득의 감소가 궁극적 원인이나 저소득 가구원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빈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 단순히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구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노인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5.5%에 비해 28.3%p 높은 편이며,¹⁾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에 따른 불충분한 노후준비,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빈곤율 산출 방식 등을 들고 있지만, 가구분화에 따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낮은 노후준비, 조기퇴직, 공적연금의 낮은 시행 등으로 충분한 노후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 혼인 등에 노후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노인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²⁾
 - 한편, 빈곤율은 경상소득으로 산출되므로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축적된 노인가구의 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함³⁾
 - 이에 더하여 현행 빈곤율 산출에 적용되는 표준화소득⁴⁾은 가구원 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구분화(자녀 분가, 황혼 이혼 등)는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고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을 노후소득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구분화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함
 - 향후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모색 함에 있어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함

2. 퇴직소득과 노인빈곤



- (퇴직 후 소득절벽) 우리나라의 퇴직세대⁵⁾는 자녀 교육, 혼인 등으로 노후준비가 늦고, 조기퇴직, 공적연금의 낮은

1) 빈곤율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자의 비율)로 산출된 것이며, OECD 29개국의 2017년 기준 조사결과임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2) 강성호·정봉은·김유미(2016), 『정년연장의 노후소득개선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3) 윤희숙·권형준(2013), 「가구유형과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KDI정책포럼』 254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주미·김태원(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가구 내 서로 다른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의 경제력을 배제하고 모든 가구를 1인 가구 형태로 가구소득을 표준화한 소득임

5) 퇴직세대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및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정의할 수 있음

사행 등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퇴직 후 소득절벽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세대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표 1〉 참조), 2006년에 55~59세인 연령 코호트는 2016년에 65~69세 고령층으로 되는 과정에서 빈곤율은 18.4%p 증가됨(14.4%→32.8%)
 - 이는 동기간 근로세대(40~44세→50~54세)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퇴직세대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퇴직세대의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충해 줄 이전소득과 같은 노후소득이 충분히 받혀 주지 못하기 때문임

〈표 1〉 퇴직세대와 근로세대의 소득변화 비교

(단위: %, 월 만 원)

구분	퇴직세대 (55~59세→65~69세) ¹⁾			근로세대 (40~44세→50~54세) ²⁾		
	2006	2016	변화 ³⁾	2006	2016	변화 ³⁾
빈곤율	14.4	32.8	18.4%p	8.2	8.6	0.4%p
경상소득	202	164	-38 (-18.8)	213	291	78 (36.6)
근로소득	129	68	-61 (-47.3)	141	212	71 (50.4)
사업소득	49	34	-15 (-30.6)	60	61	1 (1.7)
이전소득 등 ⁴⁾	24	62	38 (158.3)	12	18	6 (50.0)

주: 1) 2006년에 55~59세인 연령층이 2016년 65~69세 연령층으로 되는 경우임

2) 2006년에 40~44세인 연령층이 2016년 50~54세 연령층으로 되는 경우임

3) 2016년 값에서 2006년 값을 뺀 값

4)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 등을 포함

자료: 이은영(2019), 「가족 구성과 노인빈곤율의 연관성」, 『연금이슈 & 동향분석』, 국민연금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

- 우리나라의 이전소득이 적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적기 때문으로, 주요국의 노인가구 소득원천은 주로 공적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커 노후소득이 안정적인
 - 우리나라 공적이전 소득의 비중은 25%인데 반해 OECD 평균은 57.1%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2016년 이후 고령층의 소득원천 국제비교

(단위: %)

주요국	근로소득 ¹⁾	자본소득 ²⁾	공적이전소득	기타
우리나라	52.5	22.5	25.0	0.0
미국	35.3	15.9	41.3	7.6
일본	40.2	10.6	49.2	0.0
영국	17.5	11.3	42.6	28.6
독일	14.6	10.0	70.6	4.8
OECD	24.6	10.0	57.1	8.3

주: 1) 근로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소득을 포함

2) 자본소득은 개인연금(private personal pensions)과 비연금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포함(income from the returns on non-pension savings)

자료: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p. 185; <http://statlinks.oecdcode.org/els-2019-5292-en-g070.xlsx>

- (노인빈곤율) 퇴직소득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적고 퇴직 후 소득절벽으로 인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빈곤율) OECD 29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5.5%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43.8%로 28.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빈곤율의 경우 OECD 12.6%, 우리나라 17.4%로 약 4.8%p 정도 차이 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빈곤율(2017년 기준)

(단위: %)

국가	66세 이상	전체
캐나다	12.2%	12.1%
영국	15.3%	11.9%
한국	43.8%	17.4%
스웨덴	11.3%	9.3%
미국	23.1%	17.8%
OECD 평균 ¹⁾	15.5%	12.6%

주: 1) OECD 29개국의 평균임

자료: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 (소득 중심 빈곤 산출의 한계) 그러나,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산출되므로 전체 소득이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소득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즉, 비빈곤 가구에 속한 고령자는 자신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빈곤 노인에서 제외됨에 반해, 가구분화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가 신규 가구로 될 경우 빈곤 가구가 될 수 있음

3. 가구분화와 노인빈곤



가. 가구분화 유형

- (노인가구 구성) 우리나라 노인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총 439만 노인가구 중 노노세대가구⁶⁾는 1%,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가구는 16.1%, 노인부부가구는 33.2%, 독거노인가구는 34.2%를 차지함

6) 노인자녀세대와 초고령 부모노인세대로 구성된 2세대 노인가구를 의미함

- 노인가구 형태에서 분화가능성 있는 가구는 노노세대, 노인/자녀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타가구임

〈표 4〉 노인가구 구성 형태(2019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노노세대 ¹⁾	노인/자녀	노인부부	독거노인	기타
가구 수	4,387,910	44,133	704,366	1,454,776	1,500,413	684,222
비중	(100.0%)	(1.0%)	(16.1%)	(33.2%)	(34.2%)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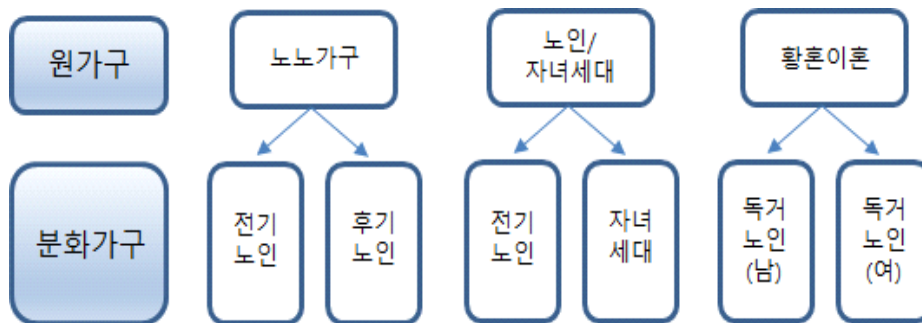
주: 1) 자녀세대(전기노인)와 부모세대(후기노인)가 모두 노인인 2세대 노인가구이며, 후기노인은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가구원수별 추계가구-전국을 정리함

- (가구분화 유형 및 특징) 노인가구의 분화는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세대간 분화되거나 황혼이혼으로 세대내 분화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분화로 가구규모는 적고(소규모화) 가구 수는 증가하게 됨

- (가구분화 유형) 세대간 분화는 노노세대가구, 노인/자녀세대가구(자녀 결혼 등으로 자녀 세대의 분가 가능)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노인부부가구도 황혼 이혼에 의해 세대내 분화가 발생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분화가구의 특징)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서 가구분화가 발생하면, 가구 규모가 축소되어 노인가구 수는 증가하고 원가구 소득은 분리되어 가구당 소득은 감소하게 됨

〈그림 1〉 노인가구분화 유형



7) 황혼 이혼에 대한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0.4%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2년 전(9.1%) 보다 1.3%p 증가함.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7.7%(14) → 9.1%(16) → 10.4%(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통계청, 「2019 고령자통계」)

나. 가구분화와 소득 변화

- 본고는 가구분화와 관련하여서 <표 4>에서 보듯이 노노세대가구(유형 1)의 비중은 1%로 매우 낮으므로 노인/자녀세대 가구(유형 2)와 노인부부가구(유형 3)의 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유형 2: 자녀세대 분화 현상) 우리나라의 가구분화는 자녀 혼인 등 중고령 시기에 주로 발생하므로 조기에 분가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에 비해 단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20대 분가 적음) 이를 20대 가구주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8.7%인데 반해 일본 33.5%, 노르웨이 35.9%로 우리나라보다 15% 이상 높은 상황으로 선진국은 조기에 분가하는 경향이 있음

<표 5> 주요국 20대 가구주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호주	일본	노르웨이
20~24세	13.1	18.5	27.8	28.0
25~29세	24.5	33.3	39.1	43.3
전체	18.7	26.2	33.5	35.9

주: 가구주 비중은 20대 가구주 수를 20대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이은영(2019), 「가족 구성과 노인빈곤율의 연관성」, 『연금이슈 & 동향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60세 이후 분가 많음) 가구주 연령별로 가구원 수 변화를 통해 볼 때 40대에 4인 가구가 가장 많아 40대까지는 자녀의 분가가 발생하지 않다가 50대에 3인 가구로 일부 분화가 나타나고, 60세 이상에서는 자녀 세대의 궁극적 분화로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퇴직 이후인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분화가 발생할 경우 노인빈곤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형태의 변화와 빈곤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표 6>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 차이(2018년)

(단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40~49세	(20.0)	(16.4)	(23.1)	(30.4)	(10.1)
50~59세	(20.4)	(26.0)	(26.8)	(21.1)	(5.7)
60~69세	(26.0)	(41.3)	(21.4)	(8.4)	(2.9)
70세 이상	(37.1)	(42.3)	(13.5)	(4.2)	(3.0)

자료: 통계청(2019), 「2018 인구주택총조사」

■ (유형 3: 황혼이혼 유형)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은 2010년에서 2019년 동안 65세 이상 자는 4.3%p, 75세 이상 자는 1.0%p 증가하여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황혼이혼은 노인가구 소득을 악화시켜 노인빈곤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된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5~54세 34.1%, 55~64세 35.2%로 약 70%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 홀로된 여성의 경우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⁸⁾

〈표 7〉 고령층의 이혼 건수 및 이혼율 변화

(단위: 건, %, %p)

구분 ¹⁾	2010		2019		변화 ²⁾	
65세 이상	4,346	(3.7%)	8,867	(8.0%)	4,521	(4.3%p)
75세 이상	605	(0.5%)	1,717	(1.5%)	1,112	(1.0%p)

주: 1) 남성기준 연령임

2) 2019년에서 2010년의 인구 및 가구 수를 뺀 값이며 변화율은 이를 2010년 대비 변화 비율로 산출한 값임

자료: KOSIS/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이혼(이혼부부의 연령별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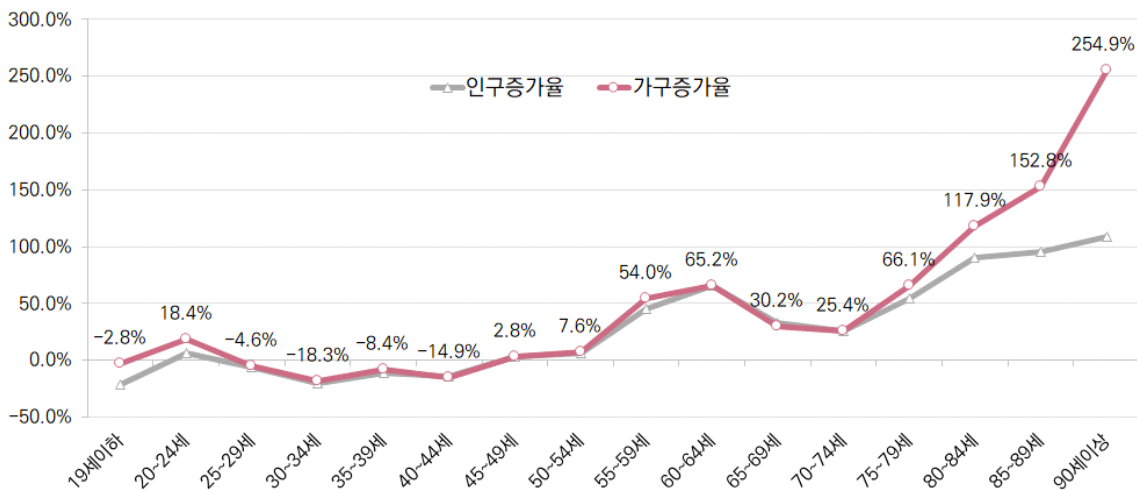
■ (노년기에 집중된 가구분화) 자녀 분가와 황혼 이혼 등으로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은 노인가구 증가율을 보여 가구분화가 노년기에 집중되고, 이러한 가구분화는 노인빈곤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인구수와 가구 수 관계로 가구분화를 설명하면 인구수 증가율보다 가구 수 증가율이 높으면 가구원 수가 적은 소규모 가구로 분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0년에서 2019년 동안 연령대별 가구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대와 70세 이후의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분화로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의 가구와 분화는 30~40대의 경제력 있는 가구와의 분화(유형 2), 황혼 이혼에 의한 분화(유형 3)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가구주 가구인 30~40대의 가구 수는 변화가 없으나 70세 이상의 신규 노인가구는 증가하게 됨
- 주요 선진국의 가구분화는 이미 20대부터 발생하여 소규모 가구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구분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적연금 등 노후자산의 축적으로 노인빈곤을 극복한 것으로 이해됨⁹⁾

8)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9) 〈표 3〉에서 OECD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과 큰 차이가 없어 주요 선진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하지 않음. OECD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UNdata(<http://data.un.org/Data.aspx?d=POP&f=tableCode%3a327>)'를 참조하기 바람

〈그림 2〉 인구증가율 및 가구증가율 추이(2010년~2019년)



자료: 1)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ageStatMonth.do#none>
 2) 가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13

■ (가구분화와 소득) 노인/자녀세대 가구(유형 2)가 분화될 경우 노인세대의 소득은 분화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큼

● 〈표 8〉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407만 원으로 나타나고 해당 가구가 분화될 경우 월 평균 소득이 87만 원으로 나타나 월가구 소득대비 38.7% 수준으로 축소되는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됨¹⁰⁾

〈표 8〉 노인가구분화와 소득 변화

(단위: 천 원/월)

구분	분화 전 가구소득	분화소득1 (노인세대)	분화소득2 (자녀세대)
근로세대 ¹⁾	4,672	-	-
노인세대 ²⁾	1,843	-	-
노인/자녀세대 (유형 2)	5,167	1,997 (38.7%)	3,169 (61.3%)

주: 1) 노인가구원이 없는 젊은 세대로 구성된 가구
 2) 노노세대, 노인부부세대 모두 포함
 3) () 안은 분화 전 가구소득대비 분화 후 가구소득 금액의 비율임. '분화 전 소득'과 '분화 후 두 세대의 합산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구분화 후 해당 집단별로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년 4분기 자료

10) 다른 유형들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4.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노인빈곤 문제는 노후소득 부족이 궁극적인 원인일 것이나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에 따른 가구분화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가구분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노인빈곤과 관련하여서는 노인/자녀세대가구, 노인부부가구의 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50세 이후 가구분화는 주로 근로 자녀세대와 분리, 황혼 이혼 등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노인빈곤과 가구분화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노인/자녀세대 가구의 분화로 신규 노인세대가구의 소득은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노인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큼
- (시사점) 가구 규모 변화가 노인빈곤을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정책과 더불어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로 노인빈곤율을 평가하면, 전체 가구의 총소득수준의 합은 동일하나 단순히 가구 분리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구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유형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와 관련하여 젊은 세대의 이른 분화와 핵가족화를 미리 경험한 선진국이 현재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가구분화에 따른 소득감소분 이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 추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kiri**